

# '96년 노동운동 전망

이 민 영(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1. 민주노총 시대의 개막

1995년은 노동조합운동이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 시행과 노사협조 강요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한해였다.

먼저 임투와 관련하여 95년 임금인상률이 12% 가까이 이른 것은 '임금연구회'의 5.6-8.6% 가이드라인으로 표현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 실제 교섭석상에서 무력화되었음을 드러낸다. 병원노동조합연맹, 사무노동조합연맹 등 합법연맹을 중심으로 한 공동교섭의 확대·강화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편 95년은 노동조합운동이 임금인상투쟁 중심의 활동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된 해였다. 민주노총준비위 차원의 사회개혁투쟁은 기업별 교섭을 통해서만 관철하기 어려운 요구를 단체교섭 사안으로 제출하게 하는 미숙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노동조합운동이 활동영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일정한 제도개선을 관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저지한 것 역시 95년 노동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진영의 경우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17명이 당선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8·15 민족공동행사에 민주노총준비위가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에서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직적인 면에서는 대기업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탈퇴와 민주노총 가입 결의가 이어졌으며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때보다 민주노조진영의 조합원이 10만 명이상 확대되었다. 한편 이제까지 정부의 통제와 법률·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자주적 진출이 가로막혀 있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94년 말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결성한 데 이어 95년에는 한국통신노동조합이 정부와 자본측의 전면적인 탄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펼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전국

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의료보협노동조합에 이어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산별 노조 건설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의 결성은 합법성을 얻은 비제조업 노동조합 연맹들을 중심으로 한 산별 노조 건설운동을 제조업에서도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민주노조들의 지난한 투쟁과 활동의 결실인 민주노총 건설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이 창립됨에 따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전노협 정신'을 민주노총이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며 지난 12월 3일 그 역사적인 막을 내렸다. 자주성과 민주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적 구심 구실을 하던 전노협, 그리고 업종회의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결집함으로써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젖혔다.

1995년 말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산업별로 조직된 734개 노조 313,872명, 지역조직 108개 노조 51,844명, 그룹조직 20개 노조 52,438명 등 418,154명이며, 민주노총은 주요 금속부문 대기업 노동조합과 사무직 노동조합,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이 출발점에서 있고 이후 조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의 활동이 이후 한국 노동조합운동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향방에 커다란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민주노총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정부는 문성현 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추진위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1월 23일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격 구속하고 11월 24일에는 한국노총과 조직대상 중복, 가맹단체에 지역조직과 그룹조직 포함, 조합원이 아닌 자의 임원 선출 등을 빌미로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사용자들도 “민주노총 출범으로 올해 노사관계는 불안정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출범의 의의와 그 활동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탄압과 사용자들의 질시가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질곡이 될 수는 없으며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과 노동조합운동의 강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노동운동의 역사가 반증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출범에 따라 유일한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지위에 손상을 입은 한국노총은 '개혁'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경총과의 입

금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내적으로는 중앙위원회를 부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산하조직의 이탈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들어서는 올해의 위원장 선거에서 개혁적인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구조화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 요소들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총의 '개혁'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출범에 따른 대응책일 뿐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재편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과제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잡기'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임자 축소, 무노동 무임금정책, 근로자파견법의 제도입 시도, 합리화공세 등 정부·자본측의 노동통제정책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구실로 한 개방정책과 재벌 위주 성장정책에 따른 경기 양극화 현상도 노동자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편 '역사 바로잡기'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개인의 권력 강화와 생색내기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적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자본주의 선진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한편으로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주체적인 면에서는 87년 이후 획기적으로 진전된 각 계급·계층의 대중운동이 하나로 결집하여 민족민주운동을 통일적으로 집중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문운동 역량의 효율적 배치와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출범의 닦을 올린 민주노총은 강령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목표이며 천이백만 노동형제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하지만 현 단계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체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은 여전히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를 임금인상 요구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과거 한국 노총이나 전노협의 최저생계비가 주로 제조업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표로 했던 데 비해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는 자가용 보유율의 증가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생활양식 변화와 사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단신남자 89만3천980원, 단신여자 87만8천442원, 2인가구 1백34만8천132원, 3인가구 1백77만5천229원, 4인가구 2백35만9천930원 등 그 액수가 과거 최저생계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민주노총은 이를 근거로 약 15% 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격차의 해소, 최저임금 개선, 임금구조 개선, 주40시간 노동제 실시, 작업중지권 확보, 고용안정 보장, 복지후생 확대 등이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계급·계층보다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사회 변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책무이다. 더욱이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대내외적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노동조합, 특히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중앙조직의 정치적 역할을 높이는 일은 절실한 요구가 되고 있다.

그 동안 노동조합운동이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임금·근로조건 개선 투쟁,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노동법 개정투쟁에 머물러 있었으며, 제도개선 투쟁이나 정치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개인의 정치 참여 이상을 뛰어 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95년에 민주노총준비위가 추진한 사회개혁투쟁도 이후 제도개선, 정치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96년 사회개

핵요구로 노동법 개정, 재벌그룹의 소유분산과 기업경영 민주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의료보험 통합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회개혁요구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산하조직들이 '사회개혁선언문' 채택하고 이를 계기로 대중적 선전활동을 펼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무튼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개혁투쟁을 집중적으로 펼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올해 민주노총의 활동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대중운동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제 선거를 비롯한 합법공간이 확대되었고 여기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난 시기의 경험은 운동세력 내의 합의와 대중적 기초 마련이 정당 건설의 선행조건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따라서 진략지역 노동자·시민후보 출마, 자원봉사단 조직, 공명선거감시운동의 전개 등을 통해 정치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변변한 정치교육 프로그램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경제투쟁과는 투쟁의 성격과 대상, 투쟁형태와 방법을 달리하는 정치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역량이 걸맞은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국민적 요구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중적 관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광주학살, 5·6공 비자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철저한 처벌 요구가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듯하다.

현재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교육·선전활동을 비롯한 일상활동의 강화, 당면한 정치투쟁의 적극적 전개, 계급·계층과의 연대활동 강화 등 구체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기존 민족민주운동조직의 강화나 재편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책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 노조 건설은 노동조합운동의 당면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4년 말 현재 13.5%로 공공부문, 서비스부문, 중소기업 등의 대다수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의 단결권 제한이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어서 법률·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서비스부문의 경우 면밀한 실태 파악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노동조합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수가 적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근본적인 한계

가 있기 마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가 갖는 부정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조직 확대와 산별 노조 건설이라는 과제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주로 사무·전문직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는 공동투쟁·공동교섭의 확대, 재정·인력의 집중, 지도·집행력의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와 실천은 기업, 직업, 고용형태, 숙련의 차이를 뛰어넘은 연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산별 노조의 상과 건설경로를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조직화, 곧 지역노조 문제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임금격차의 심화, 기업복지에 비한 사회복지의 미발달, 노동시장의 분절화 등에 따라 연대의 물질적·객관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간 임금격차만 하더라도 87년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1994년 현재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임금의 7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기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그 격차는 두세 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노동법의 적용에서도 배제된 5인 미만 노동자들의 처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임금격차의 주요한 요인은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과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이다. 임금수준이 기업별 교섭에서 결정되는 조건에서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중소기업 조직화를 산별 노조 건설 이후의 과제나 부차적인 과제로 삼는 것은 산별 노조 건설 자체를 미루는 것일 수 있다.

지역노조의 확대·강화는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 경로를 현실화하기 위한 주요 고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의 영세기업 중심의 지역노조는 재정·인력의 취약성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구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산업별 연맹의 지도·지원과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예컨대 200-300인 규모) 노동조합들의 참여 없이는 지역노조를,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소규모 산별 노조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노조의 활동에서 중앙집중성이 중요하지만 기업단위 개별 분회나 현장조직의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역노조 증양을 강화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며 노·자간의 날카로

운 대립·투쟁의 장인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노동조합운동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본측의 신경영전략이 노동조합의 현장 조직력 약화와 노동통제 강화를 그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조합은 능력주의적 임금관리, 불안정고용 확대, 기업문화운동 등 신경영전략의 각 요소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경영참가를 확대해야 한다. 자본측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공동결정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체협약 영역의 확대는 노동조합운동이 그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고 현재의 정부·자본측의 태도로 보아 큰 결실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공동결정법’ 도입을 위한 경영참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추진해 온 단체협약 영역을 확대하고 노사협의회의 내실을 기하며, 우리사주제 등 자본참가제도를 노동자들이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 물론 경영참가가 노동조합운동의 확대·강화라는 원칙에 배치되어서는 안되며 경영참가제도의 도입과 구체적인 실행도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법 개정은 노동조합운동의 주요한 과제이다.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 단결권 금지 등 주요 악법조항들은 노동조합 조직력 확대·강화를 근본에서 가로막고 있어서 이 조항들의 개정은 향후 노동운동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이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과제가 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정부·자본측의 주도로 노동관계법 개악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법 개정투쟁이 연례행사로 전락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정권의 유물인 노동악법 개정을 5·6공 청산작업과 연계하여 노동법 개정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쟁주체의 의지이다. 현재 국내외의 여론 형성과 국회에서의 로비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여론도 주체의 투쟁의지와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간의 노동법 개정투쟁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분되는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3.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

1996년은 한국 노동운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다. 매사가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기대가 큰 만큼 요구도 넘치기 마련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운동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할 뿐 아니라 운동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하나의 깃발 아래 결집하여 조직을 확대·강화하며, 투쟁과 활동의 폭을 넓히고 그 위력을 강화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중앙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출범하였으니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젖힐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조직, '21세기 한국을 책임지는' 굳건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다. 이것은 천이백만 노동형제들의 절실한 요구이며 민주노총의 역사적 임무이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은 민주노총이 험난한 앞길이 험난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로 한발 한발 다가서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미래는 밝다. ■